

여론조사를 통해 본 2009년 안보위기와 국민여론

EAI · 중앙일보 <MB취임1주년 조사(2009/02)>
EAI · 한국리서치 <3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2009/03)>
BBC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국제여론조사(2005-2009)>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정한울 · 정원철
EAI 여론분석센터
2009. 3. 27



여론조사를 통해 본 2009년 안보위기와 국민여론

EAI·중앙일보 <MB취임1주년 조사(2009/02/21)>

EAI·한국리서치 <3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2009/03/21)>

BBC·EAI·매일경제 <국제현안국제여론조사(2005-2009)>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EAI 여론분석센터_ 정한울·정원철

2009년 안보위기와 국민여론

참여정부 내내 보수적 부시 행정부와 진보적 노무현 정부 사이에서 이념적 미스매치가 한미공조체제를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Armacost 2004). 마찬가지로 리버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와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어떠한 한미공조모델을 만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의 강경정책은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연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한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집권2년차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는 새로 등장한 오바마 정부와 한미동맹의 공조틀을 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 및 북한 핵 위기국면을 타개해야 할 이중의 과제에 맞서게 된 것이다.

국민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직면한 이중의 안보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아무리 올바른 정치적 소신과 정치적 책임감에서 나온 정책이라도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거나 소위 남남갈등의 정치 갈등으로 변지기 십상이다. 미국과 북한에 대한 정부 정책은 '친미 대 반미'나 '친북 대 반북'의 이념대결 양상으로까지 변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집권 초기부터 광우병 파동에 이은 촛불시위로 곤경에 처했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현재 직면한 안보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왜 생겨나는지,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반대여론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우선, 북한의 로켓발사 시험을 전후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보위기감은 어떠한지, 국민들이 바라는 대북, 대미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진단하고자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설명해온 논리와 틀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론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정부가 참조해야 할 정치적 함의를 정리한다.



한국 국민의 대북-대미인식 변화 패턴

동아시아연구원 안보인식 분석팀은 2002년부터 안보의식 데이터 분석과정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안보인식 변화방향과 그 패턴을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반북=한미동맹 vs 반미=자주외교'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약화되고 대신 현실에서 나타나는 북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와 양국 상호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물론 남북문제와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보-혁 이념갈등 양상은 여전하다. 보수진영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아 국민들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간과하는 소위 '안보불감증'에 노출되었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2000'이라는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하면서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합적인 차원의 국민여론은 남북관계의 개선 정도와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 강도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 의한 북핵 위협이나 군사적 긴장조치가 고조되면 북한에 대한 태도가 냉각되고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무드로 돌아서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적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내영 외 2005; Lee and Jeong 2004).

이러한 패턴은 2009년 불거진 북한안보위협 하의 국민여론을 이해하고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틀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2009년 들어와 혼란스러운 긴장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4월 로켓실험 강행을 예고하고,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3.9~20)을 계기로 개성공단의 통제조치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정치군사적 강경드라이브정책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현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기존의 안보인식변화 패턴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북한에 의한 위협요인이 커지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본 조사결과는 이러한 가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09년 북한 미사일 위기와 국민안보의식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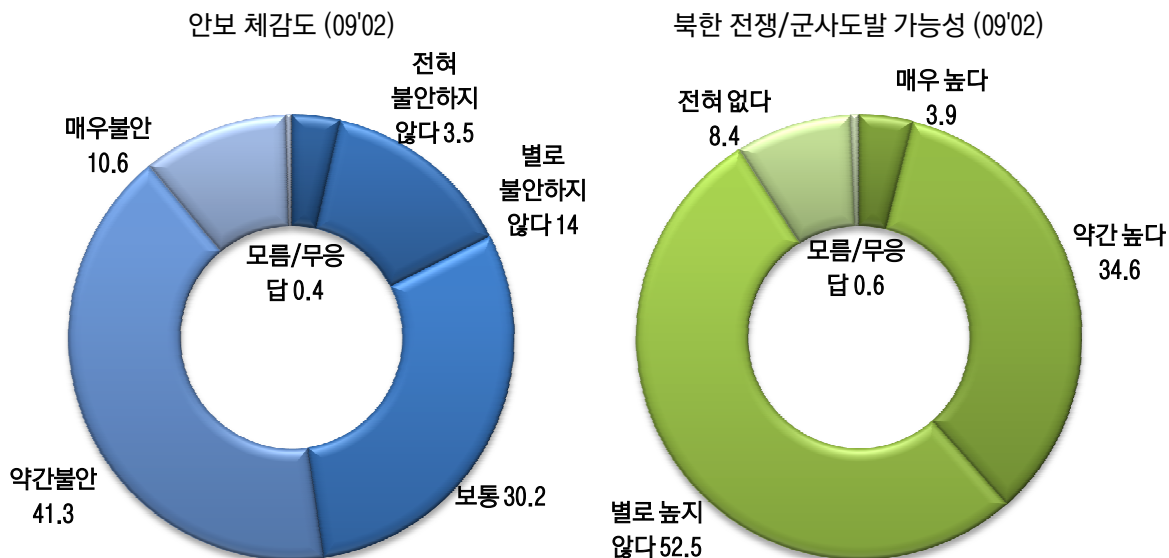
2009년 위기와 대북인식 악화

2009년 2월 조사인 [그림1]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물어본 결과 전체 국민의 과반수에 달하는 51.9%가 "불안하다"고 답했고(약간 불안 41.3%, 매우 불안 10.6%) "보통이다"가 30.2%,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7.5%(별로 불안하지 않다 14.0%, 전혀 불안하지 않다 3.5%)에 그쳤다. 또한 최근 북한이 엄포 놓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나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다" 3.9%, "약간 높은 편이다"가 34.6%였다.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이 52.5%, "전혀 없다"는 의견은 8.4%였다. 열 명 중 네 명꼴로 북한이 군사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1] 안보체감도와 북한의 전쟁/군사 분쟁 가능성 평가(%)



또한, [그림2]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안보불안감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객관적인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안보위협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던 2000년에는 “한국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18.9%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부터 시작된 2차 북핵 위기가 2004년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안보불안감은 34.8%→43%로 높아지고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무려 63.8%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안보불안감은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재개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31.9%로까지 떨어졌다. 2009년 2월 조사에서는 다시 51.9%까지 급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2006년 안보불안감에는 못 미치지만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확산된 낙관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위기감이 커지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있다. 북한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우호적인 응답비율이 2005년 11월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24.3%에 달했지만, 2006년 12월 조사에서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12.3%까지 떨어진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대선 이후 진행된 2007년 12월 조사에서는 16.6%까지 만회했지만, 올 2월 조사에서는 9.1%로까지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북한의 위협강도에 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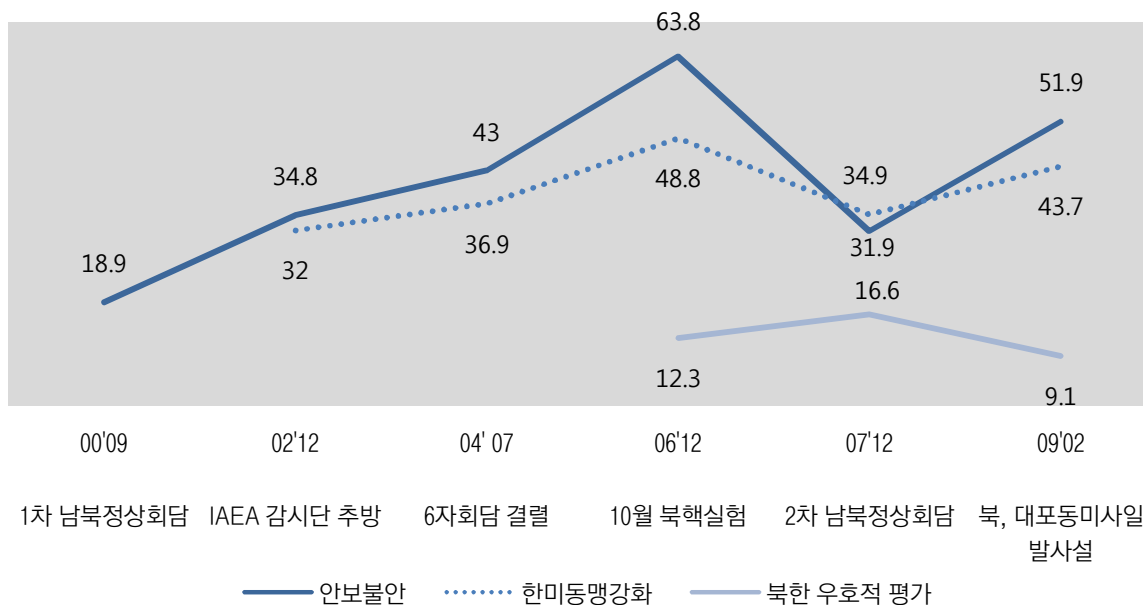


한미동맹 : 이익에 기초한 '조건부' 동맹 지지에서 '신맹(信盟)'으로의 전환?

한편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불안해질수록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될수록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접어들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2]에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2006년까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여론은 32.0%→36.9%→48.8%로 상승하지만, 다음해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34.9%까지 떨어졌다. 현재의 긴장국면 하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율은 43.7%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면서 북한 위협 억지(deterrence)의 안전판으로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여부가 주로 한국의 정치군사적 '안보 이익(interest)'에 기초하여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림3]을 보면,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2004년 51.9%에서 2005년 44.4%, 2006년 35.3%로 줄곧 나빠지고 있다. 이 시기는 이라크 전쟁이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일방주의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던 시기로서 국제사회의 불신이 확산되던 때로서 한국 국민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단순화하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불신하지만 '북핵 억지'라는 안보이익의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조건부 지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2]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와 안보인식/한미동맹 인식 변화(%)



주1 : 2000-2004년 데이터는 국방대 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임.

주2 ; 안보불안 응답수치는 '현재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중 '매우 불안하다'와 '약간 불안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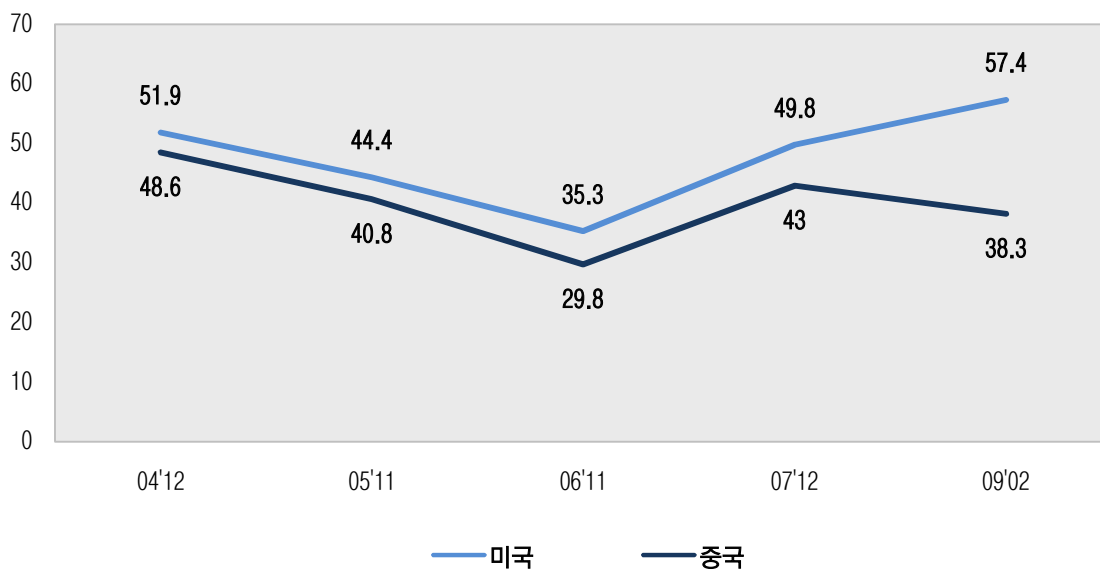


응답한 비율을 합한 값.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은 '미국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인 외교정책 추진'을 지지하면 0점, '한미동맹의 강화'를 지지하면 10점, 중도 입장은 '5점'을 기준으로 물어본 결과에서 6~10점 사이를 응답한 비율. 북한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우호적 평가 비율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중 '대체로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비율.

그러나 2007년 이래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시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06년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안보이익에 치중한 지지였다면 현재의 상황은 상당부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회복은 한국 뿐 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시 행정부 집권 2기에는 미국 일방주의 정책에 대해 안팎의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일방주의적 정책을 완화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BBC · 글로브스캔 · EAI · 한국리서치 2008).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미 대선 기간 내내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을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림 3]을 보면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2007년 12월 조사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49.8%까지 상승했고 2009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7.4%까지 올라갔다.

결국 최근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초한 지지라는 점에서 이전의 동맹에 대한 국민여론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현상이 공고화될 경우 한미동맹이 안보이익차원에서의 동맹을 넘어 최소한 한국에서는 신뢰에 기초한 신맹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 때 한국 사회 일각에서 미국을 대신할 대안으로서까지 고려되었던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어왔고 2007년에 다소 호전되었던 중국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2009년에는 악화되고 있다. 최소한 국민여론 차원에서는 '중국대안론'이 급격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내영 · 정한울 2007).

[그림3]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긍정적 평가(%)



자료 :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2004-2007), EAI · 한국리서치(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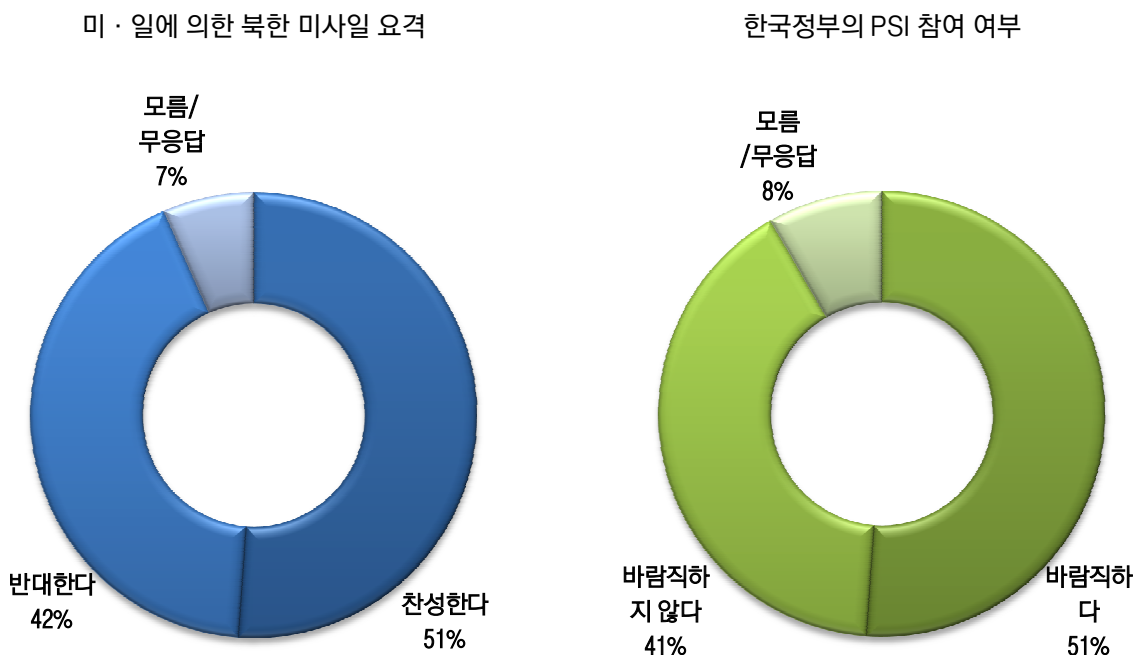
주 : “다음 국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라는 응답 비율(%)

여론을 통해 본 대북 해법 : 강온양면 절충정책

미사일 발사에는 엇갈린 대응

북한에 대한 냉담한 인식이 강화되면 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주문하는 여론도 고조되는 것이 사실이다. 3월 정기조사에서는 북한이 로켓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이 이를 격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1.1%로 과반수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42.3%였다(모름/무응답이 6.6%).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 주도의 PSI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참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을 앞서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PSI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마찬가지로 51.1%였다. PSI 참여가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40.6%로 찬성여론에 10%p 가량 못 미치고 있다(모름/무응답 8.3%).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찬성여론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림4] 미국/일본의 북한 미사일 요격 찬반 및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한 태도



자료: EAI · 한국리서치(200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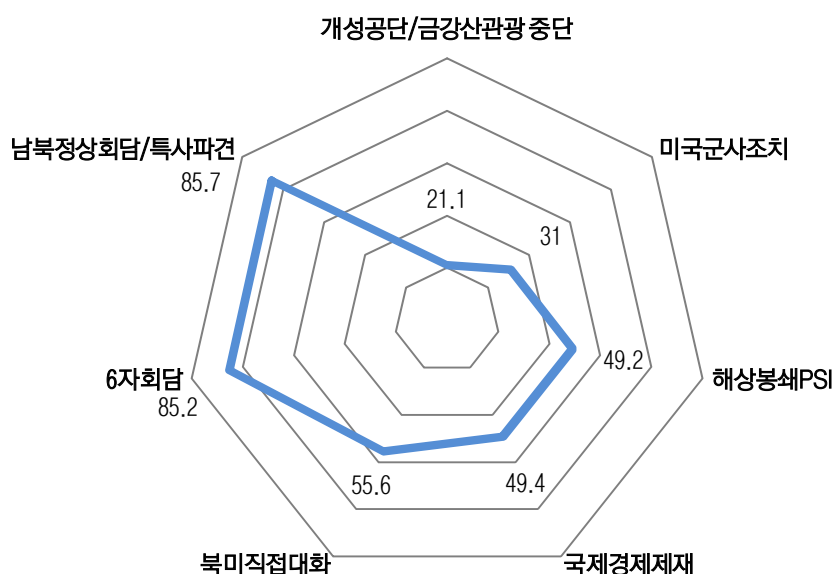
북한문제 기본 해법은 대화 우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북한의 로켓발사 실험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의 미사일 요격작전에 찬성을 표하고 한국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해 미국이 주도해온 정부의 PSI 가입여론이 과반수를 넘고 반대여론을 앞서는 등 강경한 대북 여론이 형성되었음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강경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일방주의적 압박이나 교류단절로 이어지는 것에는 경계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고 있다. 강온인식이 공존하는 상충적 태도(ambivalent attitude; Alvarez and Brehm 2003)와 절충주의적 접근(eclecticism)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atzenstein and Sil 2004).

우선, 2월 조사에서 실시한 바람직한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이나 특사파견'안에 85.7%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6자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도 8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을 뺀 '북미간 직접협상' 방안도 55.6%가 지지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국제사회 제재' 방안이나 '해상봉쇄를 포함한 PSI'에 대해서도 49.4%, 49.2%로 찬qks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군사조치'와'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은 강한 대북 압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각각 31%, 21.1%에 그쳐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고 금강산 등 대북 사업 및 대북 지원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여론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봉쇄보다는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관여(engagement) 전략의 사고가 상당히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5] 바람직한 북핵 해법 "바람직하다"응답비율 (%)



자료 : EAI · 한국리서치(0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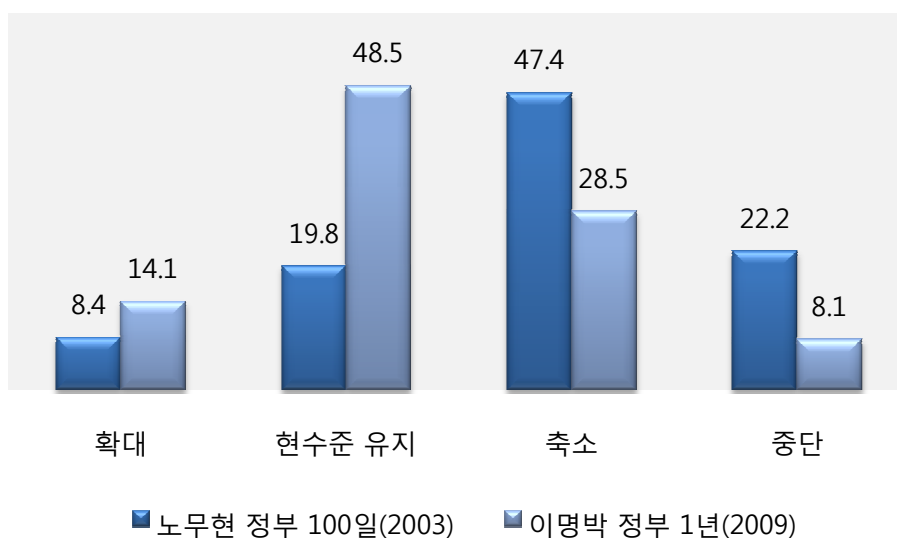


관여(포용)정책과 견제심리의 확산

특히 노무현 정부 초기 시기와 비교해보면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초기 지난 2003년 조사에서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8.4%,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19.8%에 불과했지만 “축소(47.6%)”하거나 “중단해야 한다(22.2%)”는 의견은 합해서 69.8%에 달했다. 즉 DJ 정부로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진 소위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 퍼주기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이 지난 2009년에는 안보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북한의 로켓발사나 북핵강공에 대한 강한 대처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5%로 62.6%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8.1%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유지 확대하라는 의견이 다수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그림6] 참조).

이는 한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친북이냐, 반북이냐’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소한 2000년대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기간 내내 관여정책의 방향 하에서 정책이 추진된 결과 추진된 결과 군사적 강경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일반적인 압박보다 대화와 지원을 통해 개방과 남북공존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퍼주기’를 경계하는 상호주의가, 반대로 대북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일관된 대북지원과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특정 이념에 기초한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막으려는 견제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6]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주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자료는 EAI · 한국일보(03'05), EAI · 한국리서치(0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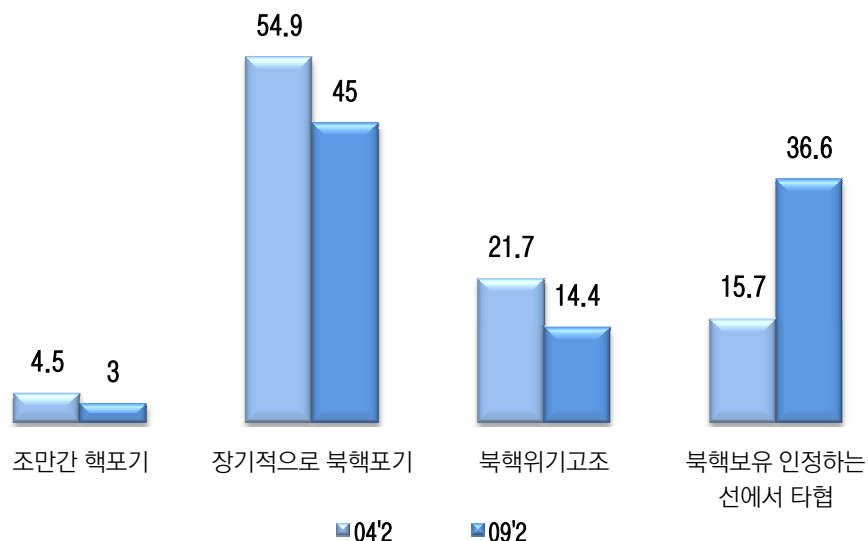


커지는 북핵 피로도, “북핵인정론”

다만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불투명했던 2006년 이전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입증된 이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불투명했던 2004년의 경우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은 4.5%, 시간은 걸리겠지만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54.9%로 낙관적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3%,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45%로 10%p 가량 줄어들었다.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2004년 15.7%에서 36.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7] 참조).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북핵공방으로 인한 북핵피로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신임 고위관계자들이 북핵 폐기 정책으로부터 북한핵을 인정한 상황에서 확산을 막는 북핵 관리정책으로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민 사이에서 결국 북한 핵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제조건이자 남북간 핵심 합의사항이기도 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진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7] 핵실험 이전과 현재의 북한 핵문제 해결전망 비교(%)



주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자료 : EAI · 한국리서치(09'02), EAI · 한국일보(04'02)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 이명박 정부의 기회와 도전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EAI 연구팀이 지난 몇 년간 강조해온 국민들의 안보의식 변화패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안보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고 그 억지력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강해진다. 2009년 안보불안이 커지면서 마찬가지로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여론은 집권2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펴나가는데 기회요인이자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부시의 일방주의적 노선으로부터 탈피를 선언한 오바마 새 대통령과 새로운 한미관계의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미국에 우호적인 국민여론으로 한결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한국 국민들 사이에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한반도 안보역지 차원을 넘어 미국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8]에서 이명박 정부 2년 차 주요 분야별 기대를 살펴보면 한미동맹의 경우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41.8%로 가장 높았던 것도 미국에 대한 신뢰회복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이명박 외교정책에 적지 않은 도전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한미관계만 보더라도 북핵 해결과정에서 얼마나 긴밀한 한미공조체제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지 아직은 가변적이다. 오바마 정부의 경우 부시 행정부가 내세운 북핵의 근본적인 폐기(CVID)가 아닌 북핵의 비확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양국 간 갈등소지가 큰 한미FTA 비준 등 잠복된 변수들도 만만치 않다.

둘째, 한국 외교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4강외교 중에서도 북핵문제 해결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최대 파트너로 나서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여론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부정적인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에서도 소위 혐한감정이 고조되는 등 양국 국민감정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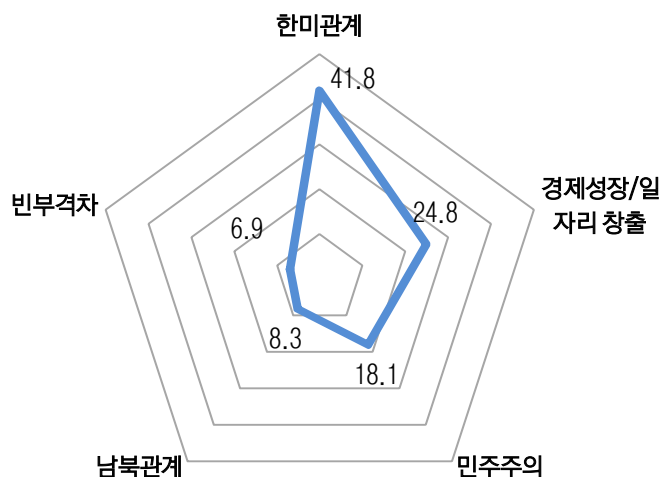
셋째, 북한에 대한 국민여론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펴나가기에 훨씬 까다로운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절충주의적 접근을 요구하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다양한 정책들을 매우 정교하게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이러한 정책대응에 성공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기대와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선언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 강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8]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이 8.3%에 불과할 정도로 냉담하다.

결국 종합해보면 국민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기회요인보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이명박 정부는 안보문제의 양대 축인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를 어떻게 그려나갈 지 원칙론은 있지만 전략과 정책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은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미국과의 동맹변환, 북핵 . 미사일 . 개성공단 등 북한 문제가 쌓여 가고 있는 가운데 집권 2년차 이



명박 정부는 직면하고 있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들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지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갈지 아니면 역대 정부처럼 정쟁과 이념갈등의 함정에 빠지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그림8] 집권 2년 차 이명박 정부의 과제별 기대 “호전될 것”(%)



| 분야 | 지금보다 좋아질 것 | 별로 차이 없을 것 | 지금보다 나빠질 것 | 모름/무응답 |
|-------------|------------|------------|------------|--------|
| 빈부격차 | 6.9 | 28.8 | 63.7 | 0.6 |
| 남북관계 | 8.3 | 38.0 | 48.9 | 4.8 |
|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 18.1 | 49.2 | 29.4 | 3.3 |
|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 24.8 | 39.6 | 33.6 | 2.0 |
| 한미관계 | 41.8 | 45.3 | 8.8 | 4.1 |

자료: EAI · 한국리서치(09'02)



[참고문헌]

- 이내영·정한울·정원철, 2005. "Global Views 2004 :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EARS Working Paper Series 2*.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 이내영·정한울, 2007.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 : 세계여론을 통해 본 중국의 현재와 미래," *EARS Working Paper Series 5*.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 Alvarez, R. Michael. 2002. *Hard Choices, Easy Answers: Values, Information, and American Public Opin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rmacost, Michael H. 2004. "The Future of America's Alliances in Northeast Asia," Daniel I. Okimoto and Michael H. Armacost, Eds. *The Future of America's Alliances in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The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 Katzenstein, Peter J. and Rudra Sil. 2004. "Rethinking Asian Security: A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J.J. Suh, Peter J. Katzenstein and Allen Carlson, 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 Nae-Young and Han-wool Jeong. 2004. "Fluctuating Anti-Americanism and the Korea-US Allian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5 No.2.



[참고자료 : 북한 미사일 관련 주요일지]

- ✓ 1975 : 北, 중국서 액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DF-61 구입해 미사일 연구 시작
- ✓ 1981 : 北, 이집트서 24기의 스커드 B형(R-17E) 미사일 및 발사대 도입해 모방생산 착수
- ✓ 1984 : 北, 스커드 B형 복사형인 사거리 280km의 개량형 스커드 A형 개발 및 발사시험
- ✓ 1985 : 北, 사거리 320~340km의 개량형 스커드 B형 미사일 개발
- ✓ 1989 : 北,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형 미사일 개발
- ✓ 1993. 5 : 北,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 1호' 동해상 발사(사거리 1,300km 추정)
- ✓ 1998. 8 : 北, '대포동 1호' 발사(북한에서는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주장. 사거리 1,800~2,500km, 무게 25t으로 추정되는 3단식 미사일)
- ✓ 1999. 9 : 北,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는 북미합의 결과)
- ✓ 2001. 5 :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럽연합(EU)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시험발사 유예하겠다"고 천명
- ✓ 2002. 9 : 北,日 정상회담 결과물로 발표된 평양선언에 "북한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로 더 연장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 삽입
- ✓ 2003. 2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인 중국제 실크웬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 ✓ 2003. 3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인 중국제 실크웬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
- ✓ 2003. 4 : 서해상에서 육지로 사거리 60km의 실크웬 미사일 시험 발사
- ✓ 2003. 10 : 동해상으로 중국제 실크웬 추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 ✓ 2004. 5 : 北,日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2002.9) 내용 재확인
- ✓ 2005. 2 : 美 중앙정보국(CIA) 포터 고스 국장 "핵무기 크기의 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
- ✓ 2005. 5 : 동해상으로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사거리 120km 추정).
- ✓ 2005. 6 : 동해상으로 개량형 실크웬 지대함 추정 3발 발사
- ✓ 2005. 6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에게 "미국과 수 교하고 우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한 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다 폐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정 장관이 전함

- ✓ 2006. 5 : 日 언론, 북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준비 언급
- ✓ 2006. 6 : 美 관리, 北 ICBM 조만간 시험발사 가능성 언급
- ✓ 2006. 7 : 대포동 2호 1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6발 등 총 7발 발사
- ✓ 2007. 5. 25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 ✓ 2007. 6. 7 : 서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 ✓ 2007. 6. 19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 ✓ 2007. 6. 27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KN-02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 ✓ 2008. 3. 28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
- ✓ 2008. 6. 26 : 핵 신고서를 6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착수
- ✓ 2008. 6. 27 :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 ✓ 2008. 11 :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 12월 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중단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 통행 제한 방침 통보
- ✓ 2008. 12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제 어떤 극단적 사태 터질지 알 수 없다”
- ✓ 2009. 1. 1 : 北 신년 공동사설 이명박 정부를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집권세력” 비난
- ✓ 2009. 1. 17 :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군복차림으로 TV 출연 “대남 전면 대결태세 진입” 주장
- ✓ 2009. 1. 30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 및 서해북방한계선 조항 폐기” 선언
- ✓ 2009. 2. 3 : 北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
- ✓ 2009. 2. 12: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를 4월 4일에서 8일 사이 발사하겠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
- ✓ 2009. 2. 24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위성’이라고 주장. 담화 내용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을 개발해왔고, ‘광명성 2호’는 이 같은 ‘국가우주개발 전망계획’에 따른 자체 개발 위성”
- ✓ 2009. 2. 24 : 北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 발사대에 모습 공개
- ✓ 2009. 4 : 北 미사일 발사 예정

